

인천지역 자율환경관리제 도입

이르면 연말께부터 인천지역의 30여개 기업이 지자체 및 정부와 협약을 체결, 대기·수질의 구체적 환경개선 목표를 정해놓고 이행하는 '자율환경관리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 지난 8월 9일 전국의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 모임에서 '자율환경관리제'를 도입한다는 데 합의, 이달중 지침을 확정키로 했다고 지난 8월 17일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전국 지자체중 가장 먼저 자율환경관리제를 도입키로한 곳은 인천으로 제일제당 인천공장, 인천제철, 대우중공업 등 30여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환경부는 말했다.

이들 기업은 대기·수질 분야로 나뉘 5년 단위로 구체적인 오염물질의 감축목표를 설정해 지자체, 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내 기업들과 자율협약을 통해 이행계획을 만들어 오는대로 인천과 같이 환경사고나 민원이 잦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자율환경관리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율협약 체결기업에는 환경시설·개선자금의 우선지원, 지도점검의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지자체에는 양여금 우선배정 등의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규제 위주의 환경관리가 행정력 및 비용 소모가 많은 반면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정공 환경기초시설 민자사업 본격 진출

현대정공이 외국 환경전문회사들과 기술·자본협력협정을 맺고 환경기초시설 민자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현대중공업은 미 투자회사인 PMDS, 소각장건설 전문회사인 호주 EPIA사, 발전소건설 전문회사인 호주 EDL사 등과 국내 환경기초시설 민자사업에 공동진출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난 8월 22일 밝혔다.

현대정공이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 건설', '도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매립지가스를 이용한 발전소 건립' 등으로 환경부는 2001년까지 30조원을 투입, 환경기초시설 620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소요자본 30조원 중 10조원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정공은 국내 최대인 강남구 도시 쓰레기 소각로를 시공하고 세계 최초로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유리화기술'을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기초시설 건설분야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환경기초시설이 미비한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 진출, 3년내에 환경시설 분야에서 5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 페놀오염' 최대사건 선정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의 환경사건으로 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이 선정됐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처 관계자, 학계전문가, 환경운동가 등 1백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환경 10대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이 1위로 선정됐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

환경전문가들이 1위에서 3위까지 정해 제출한 10대 사건을 취합, 점수를 부여해(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총점으로 순위를 정한 방법에서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은 가장 많은 113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91년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 원액 30t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페놀원액이 정수장에서 원수의 염소 소독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해 대구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한 사건으로 2차 페놀유출사고 뒤 당시 환경처장관과 차관이 경질됐었다.

2위는 공해병 논쟁을 불러일으킨 '온산병 발생'(63점), 3위로는 국토확장과 해안지역의 물자원 확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된 '시화호 무단 방류사건'(39점)이 선정됐다.

'쓰레기 종량제 전국 실시'(4위), '새만금간척사업 반대 운동'과 '환경보전법 제정'(5위), '동강댐건설 반대운

등' (6위), '안면도 핵폐기장 백지화 운동(7화)', '대만 핵 폐기물 북한반입 저지운동' (8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 (9위), '헌법에 국민의 환경권 명시' (10위)가 각각 선정됐다.

녹색연합은 "환경오염 심화는 60년대 이후 국가에 의해 주도된 경제성장 정책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호 농업용수로 쓰기 어렵다'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지난 9월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새만금사업 공사대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새만금호 수질보전 대책수립 추진계획'을 넘겨받아 1년여 자체점검한 결과, 농진공의 계획대로라면 담수를 가뒀 조성하게 될 새만금호의 수질요인중 '총인'이 기준치를 초과해 간척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미 방조제 공사비와 주민보상비 등으로 1조원 가량이 투입돼 전체 방조제 33km중 18km를 쌓은 초대형 국책사업의 재조정 또는 추가 자금투입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질예측 결과를 조만간 공식 발표하는 한편 현재 가동중인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에 넘길 방침이다.

환경부의 모델링 결과, 환경기초시설의 대대적 확충(52곳)과 인공습지 조성(600ha), 금강물의 희석수 사용(연간 4억7천만t)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진공과 전북도의 새만금호 수질유지 계획으로는 화학적산소요구량(8ppm), 질소(1ppm), 부유물질(15ppm)의 농업용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총인(0.1ppm)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것으로 예측됐다.

총인의 농도를 낮추지 못하면 새만금호는 담수호의 부영양화가 가속돼 농업용수로 쓰는 쓸 수 없게 된다.

특히 새만금호를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평균 4급수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담수호의 희석수로 끌어쓰려는 금강의 수질이 평균 3~5급수로 낮아 희석효과가 의문시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 상류 지역의 대규모 도시·공단 입지 제한 ▲ 하수처리시설의 추가 확충 및 고도처리공법 보강 등을 통해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보강계획을 마련했다.

포철 폐기물 재활용률 93% 수준

포항제철은 제철소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와 슬러지 등 폐기물의 용도 확대 노력으로 올 상반기의 재활용률이 93% 수준이라고 지난 9월 14일 밝혔다.

포철은 올 상반기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서 800만t의 폐기물이 발생해 93% 가량인 740만t을 재활용했고 나머지 60만t은 매각하거나 소각처리했다.

포철은 이같은 재활용률이 지난 90년대 초반의 70%, 2-3년전의 80% 수준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라며 앞으로 폐기물 100% 재활용을 목표로 용도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로슬래그의 경우 올 상반기 중 발생한 400만t 전량을 시멘트와 비료, 세라믹, 골재용으로 100% 재활용했으며 이중 10만t 가량은 대만과 싱가포르 등에 시멘트 원료로 수출했다.

또 폐수 정화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경우 아연성분을 제거하고 고로 등의 냉각제로 재활용, 재활용률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70%로 개선했으며 연간 30만t 가량 발생하는 더스트는 덩어리로 뭉쳐 소결 및 제강공장의 부원료로 95% 재활용하고 있다. ◀